

출판자유 의 한계는 '이성과 양식'

玄勝鍾 박사, 「사회발전과 출판」 세미나서 강조

지난 11월10일~12일 사흘동안 열린 제10회 출판경영자 세미나(출협 주최·용평 드래곤호텔)에서 玄勝鍾박사(69·한림대학장·법학)는 「사회발전에서 출판의 구실」이라는 기초연설을 통해 최근의 외설출판과 좌경도서, 북한원전 출판문제 등과 관련, “출판의 상업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출판의 자유’를 공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출판인의 이성과 양식에 바탕한 자율과 自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일 출협회장, 김낙준·허창성 부회장을 비롯한 출판사 경영인들과 학계·언론계 인사 등 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는 「정보화시대의 독서진흥책」(朴興壽·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출판기업의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金政起·외국어대 교수), 「바람직한 노사협력과 인사·노무」(姜錫仁·경기대 교수)등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玄勝鍾박사의 기초연설 요지.

“출판은 인간형성·지식전달의 수단”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사회발전 주체로서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발전 도구로서의 지식 내지 정보이다.

그런데 인간을 형성하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요, 그 교육은 주로 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판의 구실은 도서를 통해 개인의 성장, 사회의 발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인류의 행복에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고찰돼야 마땅하다.

사회발전 주체로서의 인간은 책을 통해 그가 처한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하고 광범한 지식과 경험을 터득함으로써 폭넓은 문화적 시야와 고도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교양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세계인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인으로서의 특수성을 겸비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출판은 사회발전을 추구하는데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축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형성에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원은 교과서와 참고서라는 도서를 이용해 수업을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도 그 핵심은 도서에 있다. 여기서 출판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최근의 북한원전 출판은

사회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그 세계를 이념적으로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겠으나,

그것은 비판능력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나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출판의 자유를 누리는

이성과 양식이 아쉽다.

미국 울프경영연구소의 바네트박사는 “일반적으로 도서의 생산고와 이용도는 국가의 전반적인 개발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로 생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플러가 분류했듯이, 농업사회는 노동집약적 사회, 산업사회는 자본집약적 사회인데 대해 후기산업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두뇌집약적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두뇌에 의해 산출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담아내는 도서출판은 곧 사회발전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막중한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고속적 사회변화에 따라 세대간의 사고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多世代시대에 있어, 도서출판이 없이는 그 급속하게 팽창하고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소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출판의 자유와 책임

출판은 이렇듯 사회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으로서의 출판의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私法상 또는 공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 우리 출판계 일각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에 관해 시비의 여론을 일으키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선정적인 외설출판물의 문제이다. 성인물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잡지나 단행본 등의 출판



「사회발전에서 출판의 구실」이라는 기초연설을 통해 ‘출판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玄勝鍾박사.

물에 유해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문제 이전에 이나라 장래를 짊어질 2세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런 출판물을 내놓는 업자의 출판인으로서의 이성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이념상의 문제이다. 6·29선언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좌경화된 또는 좌익의 출판물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정부의 북한자료 개방선언 등의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北韓原典을 출간하는 바람마저 출판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그 세계를 이념적으로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책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의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은, 자칫 그러한 출판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체제를 찬양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들 비롯한 청소년들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며, 그렇지 않아도 좌경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운동권학생들에게 원군을 보내주는 틀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짙으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출판의 자유를 누리는 이성과 양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쨌든 좌경서적과 외설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사법부에 의해 가려질 것이지만, 그보다는 법 이전의 문제로서 출판인의 이성과 양식에 비추어 위법성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현명함이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自律과 自淨의 노력이 출판인 개인이나 출판업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출판의 자유를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릇 자유는 자유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진흥책”

사회발전에서 출판의 구실이 막중한 만큼 출판인은 우선 그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발전에서 기여한다는 안목에서 다양한 사회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출판물을 선택하고 개발하여 광범위하게 제공하기에 힘써야 한다. 국가는 출판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자유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선이 그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출판은 교육과 맞먹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문화활동이면서도 교육과는 달리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출판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도구라는 막중한 문화적 사명이 결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출판이 지니는 중차대한 의의를 감안, 그 보호육성책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기본권의 존중에 그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출판업은 예측불가능한 것이어서 그만큼 위험부담율이 높고 경쟁이 심한 산업이므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장기발전계획에 출판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켜 출판진흥정책을 입안, 추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良書발행책, 도서의 이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출판물 유통시스템의 효율화방안 등에 관해 출판인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